



제국주의와 전쟁

긴장이 증대하는 대만해협 4면

발트해·지중해·발칸반도 긴장 고조 6면

우크라이나 전쟁 반년 12~14면

윤석열 지지율 추락은

노동운동 강화로 이어져야 3면

경찰 꼬니풀에서

경찰 수뇌로 3면

〈그대가 조국〉 영화평

조국의 억울함이

그의 정치를 미화

하지 못한다 7면

노동자 투쟁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 5면

손배·가압류와 '노란봉투법' 10면

대우조선 하청 파업과 원하청 연대 문제 11면

탈북어민 강제복송 논란 —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보기 8~10면

미등록 이주민 사면·합법화하라 16면

운송료 인상하라

계약해지·손배 철회하라

경찰 진압 규탄한다

생계비 위기의 대안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관련 기사 5면

가족의 변화와 윤석열 정부의 가족 정책

성지현

결혼·혈연으로 엮이지 않은 비친족 가구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다. 결혼하지 않고 친구나 애인 등과 동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는 성소수자 가족도 일부 포

함돼 있다. 최근 한 오티티 채널에서는 최초로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커플 세 쌍이 알콩달콩 동거하는 얘기를 다룬 관찰 예능 〈메리 퀴어〉가 논란 속에서 방영 중이다.

우파는 이런 현상을 “가족의 해체”라며 개탄하지만, 현실에서 자의든 타의든 돌 다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 가족’에서 벗어나 살고 있다.

오늘날 한국 가족의 모습

통계청 조사를 보면 ‘전통적 가족’과 현실의 간극은 그 어느 때보다 벌어져 있다.

지난해 기준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전통적 핵가족’은 전체의 28퍼센트밖에 안 된다. 반면, 부부만으로 이뤄진 가구, 한부모 가구,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증가해 왔다. 특히, 최근 1인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1인 가구의 다수는 노령층이다.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결혼 건수는 10년째 연속 하락하고 있다. 초혼 연령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여성들은 1990년대에 20대에 결혼했지만, 이제는 30대가 돼야 결혼한다.

지난해 결혼 건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가 이혼했다. 이혼 건수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증가했다가 2000년 중반부터 약간 줄었다. 혼인 건수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또 사람들은 더 적은 수의 자녀를 더 늦게 출산하며, 아이를 낳지 않기도 한다. 지난해 출생률은 역대 가장 낮았다.

한부모 가족은 전체 가구의 10퍼센트 가량 된다. 비친족 가구의 증가에서 보듯이 동거도 비중이 적지만 늘고 있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변했다. 결혼이 필수라는 생각은 남녀 모두에서 감소했고 비혼 동거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젊은 층에서는 더욱 그렇다.

가족의 변화

가족의 변화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생겨난 사회의 구조적 변화의 일부다.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임금 노동 참여가 증대하면서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과 자의식이 높아졌다. 이것은 결혼과 출산,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 변화로 이어졌다. 젊은 층에서는 가족에 대한 헌신과 노력보다 개인의

성취와 자아실현을 더 중시하는 태도가 두드러진다.

경제 위기와 불황으로 인해 오늘날 청년층의 삶이 불안정해진 것도 결혼과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행복한 가족’을 꾸리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 주택 마련을 뺀 결혼 비용만도 수천만 원이 소요된다. 광고나 TV 프로그램 등에서 제시되는 가족은 부부와 아이들이 널찍한 아파트에 최신식 가전제품과 자동차를 보유하고, 여유로운 휴가와 취미 생활을 즐긴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여성은 물론, 남성의 평균 임금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란 불가능하다. 가계 대출은 기록적 수준이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복지 부족은 원하는 대로 가족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물론 여전히 가족이 결속하도록 하는 압력이 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소외나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기댈 곳은 가족밖에 없기도 하다.

그러나 바람과는 별개로 누구든 오늘날 노동계급 가족이 처해 있는 현실적 제약을 무시할 수는 없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 돼야 한다. 개인들이 선택하는 관계들이 존중받고, 누구든 그런 관계 속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양육과 돌봄은 개별 가족의 책임으로 내맡겨지는 게 아니라 사회가 맡아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 경제 불황과 지배계급의 긴축 정책 때문에 노동계급 대중의 삶은 불안정해지고 종종 삶이 파탄난다. 지배계급은 실업 증가, 복지 삭감 등에 따른 부담을 개별 가족에 떠넘기면서 보수적 가족 이데올로기를 부추긴다.

작년 혼인 역대 최저...5년만에 20만건대 무너졌다

송고시간 | 2022-03-17 12:00

한국어

FRANÇAIS

日本語

中文

전다채 기자

'가족의 재탄생'...친족 아닌 가구원 100만명 돌파, 역대

송고시간 | 2022-08-01 06:02

주요

국민서 기자

김민서 기자

비친족가구 47만, 가구원 101만명...결혼은 서울·경기 거주

인적공제·주택청약 등 새로운 가족형태에 맞는 법·제도 개선해야



윤석열 정부 — 포용은커녕 후퇴 조짐

여러 법과 제도가 가족에 개입한다. 가족구성원연구소의 한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 ‘가족’이 언급돼 있는 법률이 240여 개나 된다.

그런데 이 나라 법은 대체로 가족을 결혼·혈연·입양으로 협소하게 규정한다(소수 법에서만 이성 간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다). 이에 부합하지 않는 여러 형태의 가족들은 주거·의료·상속·연금 등 권리·지원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다.

또, ‘전통적 가족’의 모델을 기본으로 상정하고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을 ‘취약 가족’이나 ‘위기 가족’으로 선별해 편견을 부추긴다. 지원을 충분히 하는 것도 아니다.

간병 등 돌봄과 관련한 법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등)은 돌봄 책임을 명시적으로 가족에 떠넘기고 있다. 1차적 책임은 가족에 있고, 국가는 가족의 부담이 지나칠 때 좀 덜어주면 된다는 식이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겠다’며 건강가족기본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우파뿐 아니라 그 정부 내부에서도 반대에 부딪혀 그 계획은 무산됐다. 당시 여가부가 내놓은 안 자체도 현실의 필요를 따라가기에 매우 미흡했는데 말이다.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이런 시도조차 없다. 오히려 후퇴의 움직임마저 있다.

지난 5월 〈한겨레〉 보도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는 아빠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폐기 계획을 백지화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일부였다.

당시 기독교 우파들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가정 해체와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며 거세게 반대했다. 그런데 지금 여가부 장관 김현숙 자신이 매우 보수적인 인물이다. 그는 19대 국회의원을 지낼 당시 낙태와 동성애는 물론, 피임·이혼·인공수정에까지 반대 의사를 내비친 ‘국제가톨릭의원네트워크’의 임원이었다.

얼마 전 여가부가 발표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정책에도 실제 다양한 가족을 폭넓게 포괄한다는 취지는 없었다. 다만,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에 지원을 생색내기 수준으로 찔끔 늘리겠다고 한다.

예컨대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행 중위소득 52퍼센트에서 58퍼센트로 늘리겠다고 한다. 지원 대상을 약간 늘렸지만 여전히 선별하고 또 선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가족이 처한 현실을 볼 때 이 정도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 밖에 결혼·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여러 형태의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이 정부에게 완전히 관심 밖이다.

무엇보다 이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 억제 정책, 대규모 부자 감세와 긴축은 노동계급 가족을 더 옥죄는 것이다.

윤석열 지지율 추락은 노동운동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8월 첫째 주 한국갤럽 정기조사에서 윤석열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4퍼센트로 떨어졌다(부정평가 66퍼센트).

주된 이유는 문재인에게 실망해 윤석열에게 투표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실망이 커진 것이다. 이는 또한 우파층에서도 이반이 생겼다는 뜻이다. 영남 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높다.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역전당했다. 갤럽 조사 기준으로는 석 달 만이다.

이 정도면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이 시작되기 직전 우파 지지율 수치다.

문제는 윤석열이 취임 90일 된 정부라는 점이다. '레임덕' 대신 '취임덕'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취임 초에 이 정도로 인기가 추락했던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유일했다. 이명박은 촛불 운동의 직격탄을 맞아 취임 1년 만에 지지율이 추락했다.

지배계급 처지에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계급의 조건을 공격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지금 지지율 하락 속에서 국민연금 개악과 노동 개악은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오히려 화물연대와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에 양보를 해야 했다.

게다가 어설픈 교육 개악안을 꺼냈다가 지지율 하락에 일조했던 교육부총리 박순애가 취임 한 달 만에 사퇴해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위기는 세계적 리더십 위기의 일부다. 미국 바이든은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고, 영국 보리스 존슨은 총리직을 사임했으며, 이탈리아는 연정이 무너졌다. 프랑스 마크롱과 독일 올라프 숄츠도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스리랑카와 수단 등 제3세계 나라들과 아르헨티나 등 라틴아메리카 주요국들에서는 대중적 저항이 분출했다.

고통 전가가 지지율 폭락의 진정한 주 요인이다

윤석열은 물가 폭등 상황에서 전기 요금을 올렸다.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노동자·서민을 정부

재정을 풀어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부자 감세를 단행했다. 공공요금 추가 인상과 전력·철도 등의 민영화도 추진하려고 한다.

고물가의 한 배경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도록 미국과 나토를 지원하는 정책도 평화를 역행하는 것이자 대중의 생계비 위기를 악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초래한 생계비 위기(특히, 임금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다)에 대한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

6월 초부터 이어진 화물연대 파업,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이 바로 생계비 위기에 대한 저항이었는데, 이 투쟁들은 광범한 지지를 받았다. 윤석열은 강경 대처를 여러 차례 천명했으나, 결국은 양보하고 타협해야 했다.

모순

정부의 위기로 사용자들과 우파는 슬슬 초조해지는 듯하다. 더구나 한국 지배계급이 처한 경제·안보 위기와 모순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천명했지만, 막상 대중국 무역 적자가 3개월 연속 이어지자 크게 당황했다.

그래서 윤석열은 미국 여권의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한국을 방문했는데도, 군색한 변명을 대며 만남을 피했다.

특히, 낸시 펠로시는 중국 정부를 한껏 자극하며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린 뒤, 다음 행선지로 한국을 택했다. 그래서 더욱 윤석열은 펠로시를 환영하는 모양새를 취하기가 난처했던 것이다.

지금 중국은 대만 포위 실탄 훈련에 이어 서해 두 곳(랴오닝성·장쑤성)에서 대규모 실탄 훈련을 벌이고 있다.

억압 기구

이런 배경 속에서 우파는 화물연대 파업 때처럼 무르면 안 된다고 즐기치게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8월 4일 <조선일보>가 사설로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투쟁이 사용자 측을 너무 위협한다며 경찰은 뭐 하냐고 불평을 하자 그날 오후 경찰은



강원도 홍천 하이트진로 공장 앞 화물연대 대오를 강제 진압했다. 다음 날 <조선일보>는 이 소식을 1면 톱으로 실었다.

경찰과 검찰은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투쟁에 대해 즐기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투쟁 대오를 압박하고 괴롭히고 있다.

그런 와중에 윤석열이 일선 경찰에 총기 지급을 확대하고 사격 훈련과 사용을 늘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8월 3일 보도됐다.

김일성 회고록 출판 건으로 출판사와 관련 연구자를 기습하더니, 7월 25일에는 해군 사병을 복한 찬양 혐의로 기소했다.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노동자 운동에 대한 공격 명분과 세력 확보를 위해 억압적 국가기관들에 더욱 의존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윤석열 정부가 강하고 자신 있어서가 아니다.

현재 노동운동은 윤석열 정부의 탄압에 대해 효과적으로 광범한 연대를 구축하지는 못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투쟁, SPC(파리바게뜨)의 사회적 합의 번복에 대한 항의 등이 이어지는데, 이 투쟁들은 서로 연결되지 않으며, 이 투쟁들과 광범한 생계비 위기에 대한 불만이 연결되지도 않는다.

하이트진로 파업,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등에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노동운동은 '노란봉투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법) 제정을 요구했다. 법 제정에 앞서 먼저 아래로부터 만만찮은 대중 투쟁이 요구된다.

이명박이 임기 초 촛불 운동에 부딪혀 지지율 추락 위기를 겪었지만, 7월쯤 촛불 운동이 사그라들자, 국가정보원·경찰·검찰 등의 민간인 사찰·공작·탄압을 통해 반격하면서 전열을 재정비했던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

김문성

이렇게 생각한다

경찰 끄나풀에서 경찰 수뇌로

노동운동 파괴자 김순호는 사퇴하라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된 김순호가 군부독재 정권 시절 경찰 끄나풀이었다는 의혹이 매우 신빙성 있게 제기됐다.

김순호는 1989년 초 자신이 회원이던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를 보안 경찰에 밀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 전에 이미 학생운동 시절 강제 징집된 후 전두환의 녹화 사업(운동권 학생들을 강제 징집해 '특별교육' 시켜 경찰 끄나풀로 활용)에 포섭돼 협조했다는 의혹도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은 반정부 운동을 가공할 폭력으로 탄압했다. 그의 일환으로 일부 학생들을 협박하고 회유해 첩자로 만들어 운동에 침투시켰다. 운동 내부 정보를 파악하고 운동의 분열을 꾀해 와해시키는 것이 첩자(끄나풀)의 임무였다.

이런 자들의 활동과 존재는 혁명가들에게 연행·고문·구속·생활고 못지 않은 고통을 안겨 줬다. 혁명가들이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들어 신뢰와 신념이 파괴되는 데 일조했기 때문이다.

김순호는 바로 그런 밀고자 활동을 인정받아 대공수사관으로 특별채용됐다. 이는 그가 자신의 행위에 별로 수치심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보안경찰에 체포돼 고문에 못 이겨 자백을 하고 사기가 저하돼 혁명적 대의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김순호는 그런 경우가 전혀 아니다. 본인의 안위와 출세를 위해 동지들을 팔아먹은 보상으로, 경찰로 채용돼 심지어 고위직에까지 오른 것이다.

1990년부터 수차례 범인 검거 유공 표창을 받았고, 1995년에는 김영삼으로부터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

이후 김순호는 경찰청 보안과장,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 수사국장 등 보안 수사의 요직(수사기획·지휘, 정보수집, 탈북민관리 등)을 두루 거쳤다.

이는 그가 수십 년간 국가정보원 공안 파트, 검찰의 공안 검사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였음을 뜻한다.

윤석열이 이런 비열한 쥐새끼를 경찰 수뇌에 앉힌 것은 경찰을 통해 사찰과 공작을 더 늘리겠다는 뜻이다. 마침 경찰청장 내정자도 정보 경찰 출신 사찰 전문가다.

김순호는 사퇴해야 마땅하고, 김순호가 관여한 프락치(정보원, 앞잡이) 공작 관련 자료도 공개되어야 한다.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이후 긴장이 증대하는 대만해협

8월 2일 미국 하원의장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다.

중국의 강력한 맞대응이 예상되는데도 펠로시는 대만 방문을 강행해 대만과 그 주변 정세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대만에 가면서 발표한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펠로시는 이렇게 강조했다. “세계는 [중국·러시아 같은] 독재 정치와 [미국·대만 같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미국이 자국의 패권을 위해 오랫동안 대만의 독재자 장제스를 후원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미국의 고위 정치인이 대만에 가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대만해협의 불안정이 고조돼 왔는데, 이번 사태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질 듯하다. 조만간 1995~1996년 대만해협 위기에 비견되거나 그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벌어질지 모른다.

중국은 펠로시 방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잇달아 내놨다. 대만 경제에 대한 제재도 일부 단행했다. 무엇보다, 대만을 포위하는 대대적인 군사 훈련을 8월 4일부터 진행했다. 이 훈련에는 중국이 보유한 항공모함도 투입됐다.

중국이 정한 훈련 지역 6곳 중 3곳이 대만 영해를 넘었고, 중국 군함과 군용기들이 대거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대만을 위협했다. 중국 관영 CCTV는 이 훈련을 두고 “문을 닫아 놓고 개[대만]를 패는 모양새”라고 했다.

4일 중국이 발사한 미사일 4발이 대만 상공을 가로질러 대만 동쪽 바다에 떨어졌다. 5일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 군함이 대만 동쪽 해안 코앞까지 진출한 사진을 공개했다.

이번에 중국은 대만을 포위해 침공하는 모의 훈련을 한 것이다. 대만 동쪽으로 진출한 군함·무인기들과 동쪽 바다에 떨어진 미사일을 통해, 중국은 유사시 대만을 지원하려는 미국·일본 군함을 저지할 것임을 보여 줬다.

이번 사태는 대만을 둘러싼 분쟁이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중국군 훈련으로 세계에서 가장 봄비는 항로인 대만해협의 취약성이 새삼 확인됐다. 대만해협을 지나야 하는 액화천연가스 운반선들은 항로를 변경하거나 운항 속도를 줄여야 했다. 세계에서 15번째로 큰 항구인 대만 가오슝으로의 출입이 어려워지자, 해운사



대만해협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수 있는 위험한 화약고다. 8월 4일 중국군의 로켓포 훈련

들은 손실을 감수하고 우회해야 했다.

대만 인근의 항로는 한국·일본 등이 해상 물류를 위해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심각하게 벌어진다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군사 대치로 대만산 반도체 공급까지 차질을 빚는다면, 세계경제가 받는 충격은 매우 클 것이다.

반도체

이처럼 대만이 갖는 중요성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물러설 수 없는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장악하는 (재)통일 완수를 자국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 왔고, 대만이 독립 선언을 할까 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리고 대만 내 독립 주장에 거칠게 반응하며, 미국이 대만 독립 세력을 고무할까 봐 우려해 왔다.

반면 미국에게 대만은 인도·태평양을 지배하기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곳이다. “대만해협에서의 항행 자유는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 미국의 이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해협은 항해 및 항공 노선뿐만 아니라 글로벌 통신 및 인터넷, 그리고 네트워크 안보 영역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장영희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면 중국의 영향력은 지금보다 훨씬 커지지만, 미국의 패권과 아시아 동맹 체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우파 경제사학자이자 <블룸버그> 칼럼니스트인 닐 퍼거슨은 지난해 이렇게 썼다. “[미국이] 대만을 상실하는 것은 아시아 전체에, 오늘날 ‘인도·태평양’으로 부르는 지역에 대한 미국의 우위

가 끝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대만 문제에 적극 관여해 왔다. 바이든은 미국 군함이 대만해협을 관통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의 빈도를 이전보다 훨씬 늘렸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겨냥해 동맹을 결집해 왔다. 미국은 영국·호주와 오커스(AUKUS) 군사동맹을 결성하면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기로 했다. 6월 나토 정상회의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대만 관여에 소홀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을 향해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었다. 바이든은 대만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의향을 묻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펠로시의 대만 방문도 대만 방어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자는 미국 정치권의 초당파적 분위기가 반영된 행보였다.

미국의 대만 정책에 반발해 중국 시진핑 정부는 대만해협에서 빈번한 무력 시위 등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 왔다.

펠로시 방문을 계기로 대만을 향한 중국의 강경 행보는 더 지속될 듯하다. 대만을 코앞에서 압박하는 중국의 무력 시위가 이번만으로 끝나지 않을 공산이 꽤 있는 것이다.

전쟁 시뮬레이션

물론 미국과 중국 양측은 모두 정면 충돌을 피하려고 자제하기도 했다. 예컨대 미국은 중국을 너무 자극할까 봐 자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 맨-3의 시험 발사를 연기했다. 중국도

펠로시가 대만을 떠난 후에 군사 훈련을 시작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번에 중국은 강화된 군사력을 과시했다. 1996년 대만해협 위기 당시 미군 항공모함에 압도당했던 중국군은 이제 과거지사라는 것이다.

이는 미국을 적잖이 자극할 것이다. 안 그래도 미국 국방부와 유력 싱크탱크들은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충돌하면 미국이 패배할 수 있다는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를 계속 내왔다. 미군 전력은 전 세계에 분산된 반면, 중국은 본토 가까운 곳에서 전력을 비교적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결과에 따라 이들이 내놓는 제안은 대개 미국의 신속한 군비 증강, 일본·호주 등 동맹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대만의 무장 강화 등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대만을 중요한 동맹국으로 명시하고 대대적인 안보 지원을 한다는 골자의 대만정책법안이 논의 중이다.

중국이 대만 봉쇄 훈련에 들어가자, 일본은 극초음속미사일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방위성은 사거리 1000킬로미터 미사일의 조기 배치 비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 한다. 일본 지배자들이 중국을 겨냥한 공격 무기 개발과 배치를 미국의 지지 속에 서두르고 있다.

이처럼 대만을 둘러싼 긴장의 주된 책임은 경쟁하는 미국과 중국 두 제국주의 국가에 있다. 이 두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충돌은 자칫 대만 외에 다른 지역으로 번질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핵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자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 대만의 갈등을 키운 제국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그러려면 한국 정부가 대만 문제에서 미국 편을 드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비록 이번에 대통령 윤석열이 중국을 의식해 방한한 펠로시를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해서도 안 된다. 중국도 제국주의 강대국으로서 ‘하나의 중국’을 앞세워 대만을 위협하며 대만 국민의 자결권을 침해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경합하는 제국주의 체제와 그들의 긴장 증대 행위 모두에 반대하는 것은 대만해협 전쟁에 한반도도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김영익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두 달 넘게 파업을 벌여 온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이 투쟁 거점을 강원도 홍천 공장 앞으로 옮겨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8월 2일 파업 노동자들은 홍천 공장의 유일한 진출입로인 ‘하이트교’를 막고 농성을 시작했다.

하이트진로 홍천 공장은 테라·하이트·맥스·필라이트 등 하이트진로 맥주의 절반 이상을 생산한다. 특히 호프집이나 치킨집에 납품되는 생맥주 제품은 유통기한이 짧아 출고가 지연되면 손해가 크다. 맥주 성수기를 감안하면 생산과 이윤에 타격을 가해 사용자 측을 압박하기 효과적인 곳이다.

실제로 파업 노동자들의 봉쇄로 제품이 제대로 출고되지 못했고, 그래서 생산에도 차질을 빚었다. 압박을 받은 사용자 측은 8월 4일 교섭에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적잖이 수용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농성 사흘째 경찰이 무자비한 강제 해산에 나섰다. 결국 경찰 보호 하에 제품이 일부 출고되자, 사측의 태도가 돌변했다. 교섭을 거부하고는 8월 8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조합원 전원을 해고하겠다고 협박 모드로 돌아섰다.

이런 태세 변화를 보면, 그들이 양보하려 할 때는 생산과 이윤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될 때임을 알 수 있다.

경찰 탄압으로 다리 난간에 몸을 묶고 저항하던 화물 노동자 5명이 11미터 아래 홍천강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모두 구조됐지만, 급류에 휩쓸린 조합원 1명은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 70대 조합원은 살갗이 벗겨지고, 피멍이 드는 끔찍한 부상을 당했다.

파업 노동자들은 공장 앞 ‘하이트교’에서는 밀렸지만, 인근 교차로 공장 진출입로에서 입출고 차량을 저지하는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한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사측과 경찰이 우리를 더 뽕뽕 뭉치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끝장을 볼 것입니다.”

운송료는 15년 전 수준

6월 초 8일간의 화물연대 전국 파업이 끝났지만,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지금까지 지속해 왔다.



하이트진로 노동자 투쟁은 생계비 위기에 맞선 저항의 연장선에 있다. 8월 5일 홍천 공장 진출입로에서 입고 차량을 저지하고 있는 노동자들

유가 폭등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15년 전 수준의 낮은 운송료(임금)로는 더는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유가가 좀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하이트진로 물류회사 관계자도 한 시사 프로(KBS ‘한끼시사’) 인터뷰에서, 같은 물류회사 소속이면서도 경기도 이천 공장과 충북 청주 공장 화물 노동자들이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실토했다.

그래서 파업 노동자들은 운송료 30퍼센트 인상, 공병 운임 인상, 공회전 비용 지급, 공휴일 할증 등을 요구한다. 이는 동종 업계 화물 노동자들과 하이트진로 다른 공장의 운송료 수준을 겨우 따라잡는 정도다.

그만큼 하이트진로 이천·청주 공장 화물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열악하다. 치솟는 물가와 유가 폭등 상황에서 파업 노동자들은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말한다. 파업 노동자들의 요구는 절박하고 정당하다.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은 6월 초 화물연대 파업, 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 등 생계비 위기에 맞선 저항의 연장선에 있다.

사용자 측은 자신들이 제시한 5퍼센트 인상안에서 물러서려 하지 않는다.

경제 위기 시기에 이윤몹을 줄이는 임금 인상 요구에 자본가들은 쉽사리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 개별 사업장뿐 아니라, 더 넓은 부문의 이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생산과 이윤에 타격을 가하는 단호한 투쟁과 더 넓

은 연대가 필요한 이유다.

‘하이트교’ 앞 봉쇄와 경찰의 폭력 해산 시도가 얼핏 보여 준 교훈이다.

130명 해고, 28억 손해

하이트진로 사용자 측은 130여 명 전 조합원 계약 해지, 손해가압류 청구로 파업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7월 말에는 손해배상 청구액을 5배 넘게 늘렸다. 조합원 11명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액이 무려 총 28억여 원에 이른다. 소식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공분도 일고 있다.

손배가압류는 노동자들을 극심한 고통에 빠뜨린다. 대표적으로 2009년 77일간 점거파업을 한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 30명이 해고와 강제 진압, 손배가압류로 인한 생활고와 트라우마로 목숨을 잃었다. 악랄한 손배가압류에 노동자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최근에는 일명 ‘노란봉투법’(노조 파업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금지하자는 법)도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집권당이자 국회 과반수당일 때조차 우파 핑계대며 ‘노란봉투법’ 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들에 의존하지 말고 대중적인 계급투쟁을 해야 한다.

무더기 연행과 구속

친기업 언론들은 ‘소주 대란에 이은 맥주 대란’ 운운하며 ‘소주 운송기사들이 왜 맥주 공장 앞에서 농성하냐’며 비난한다.

그러나 하이트진로 파업 노동자들이

원청인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투쟁하는 것은 정당하다.

파업 노동자들은 길게는 30~40년, 짧게는 20년 가까이 차량에 하이트진로 제품 홍보 로고를 부착하고 하루 12시간 가까이 화물을 운송해 왔다.

게다가 하이트진로 원청이 위탁 운송사 수양물류의 지분 100퍼센트를 갖고 있다. 수양물류 대표이사를 비롯해 주요 임원들은 전현직 하이트진로 고위 임원이기도 하다. 이들 중 한 명은 과거 금속노조 만도지부, 유성지회에 대한 노조 파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인물이다.

경찰은 그동안 사측의 충실한 경비대 구실을 해 왔다. 대체 수송 차량을 보호하고, 파업 노동자들을 향해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고, 강제 연행하고, 구속영장을 남발했다.

지금까지 화물 노동자 75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항남열 하이트진로 지부장 등 3명이 구속됐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와 무장 강화 시도가 누구를 향하는지를 보여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이는 6월 화물연대 파업과 대우조선 하청 노조에서 체면을 구긴 지배자들이 세력균형을 뒤집으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은 사용자 측과 윤석열 정부의 완강한 공격에도 굳건하게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이 노동자들이 고립되지 않고 사용자 측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도록 연대가 더 확대돼야 한다.

안우춘 노동자연대 총정치회 회원

발트해에서 지중해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른 갈등들도 달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회로 서방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러시아를 약화시키려”(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 애쓰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막대한 무기를 지원해 러시아에 출혈을 강제하는 대리전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미 미국은 러시아 1년치 군비 지출의 80퍼센트에 이르는 540억 달러 어치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고, 그 지원은 계속 늘고 있다.

서방의 무기 공급은 전선을 교착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우크라이나보다 재래식 전력이 압도적으로 강력한 데도 러시아가 전황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우크라이나 밖에서 서방의 러시아 억지 노력은 서방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직접적 군비 증강은 그 한 수단이다. 이미 세계 최강 군사 동맹인 나토의 회원국들이 앞다퉈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 올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세계 군비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넘겼다고 발표했는데, 보고서는 유럽의 군비 증강이 계속될 전망임을 특히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내총생산(GDP)의 2퍼센트 이상 군비를 지출하는 나토 회원국의 숫자는 올해 9개로 늘었다. 2024년이 되면 19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개중 눈에 띄는 군비 증강 사례는 독일과 폴란드다. 독일의 사민당·녹색당 연정은 1000억 유로(약 135조 원)를 특별군사비로 책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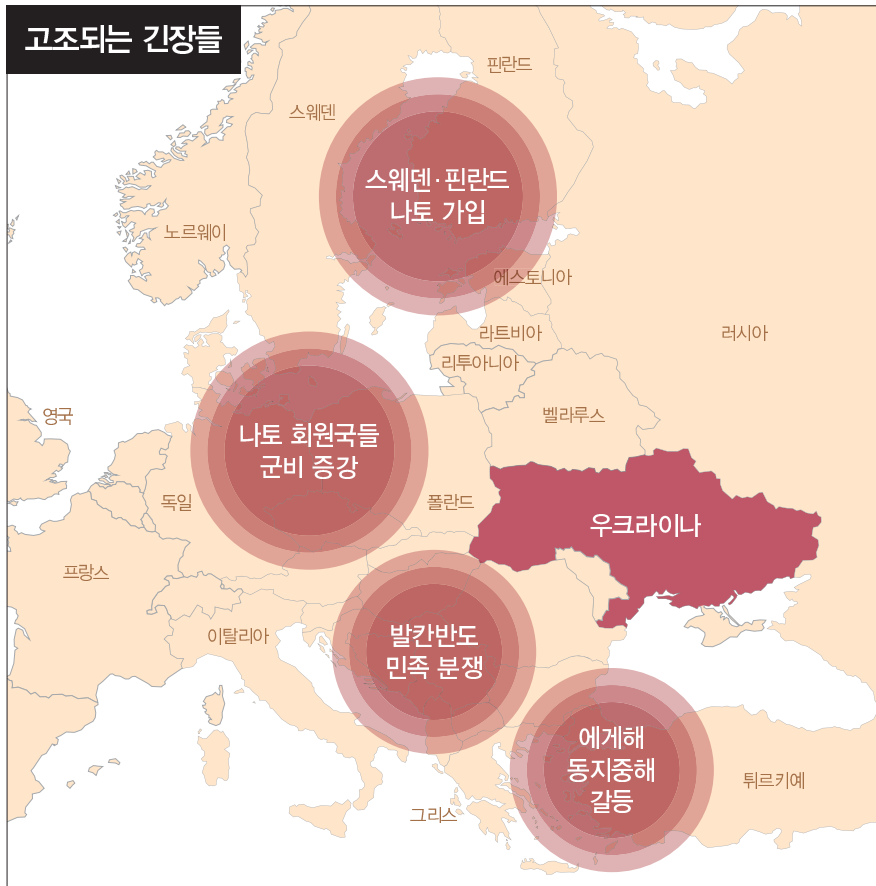
최근 한국과 20조 원 규모의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는 GDP의 3퍼센트를 목표로 군비 증강 중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무기 지원과 친러 국가 벨라루스에 대한 억지력 확보가 그 명분이다.

군사 동맹 자체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 나토 정상회의에서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승인됐다. 발트해에서 동지중해에 이르기까지 나토 회원국들과 러시아가 면한 국경의 길이가 곱절 가까이 늘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지역 곳곳에서 갈등들이 새로운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발트해

발트해 연안은 그 직접적 사례다. 오



랫동안 서방 강대국들은 발트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억지하려 애써 왔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한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발트3국’)를 재빨리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그런데 발트해의 주요 국가인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발트해에서 위험한 충돌 가능성이 대두됐다.

6월 중순부터 한 달 가까이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와 러시아의 영토인 칼리닌그라드를 잇는 철길을 봉쇄했다. 이는 스웨덴·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필요함을 보여 주려는 조치였던 동시에, 발트해 연안에 나토의 군사력이 더 많이 투입되도록 할 조치였다.

러시아에 인접한 발트3국의 육상 국경은 러시아와 러시아 영토인 칼리닌그라드, 그리고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에 둘러싸여 있다. 이제 발트해 북쪽으로 나토 동맹이 확대되면서 발트3국은 자신들의 숨통이 더 트이기를 기대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 나토는 발트3국에 신속대응군을 급파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의 철도 봉쇄에 대응해 러시아가 핵무기를 들먹이며 위협하자, 나토는 신속대응군을 수천 명 증파했다.

갈등이 정도 이상으로 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 양측의 압력 때문에(발

트3국과 러시아가 직접 교전하면 나토는 회원국 상호 방위 의무 조약에 따라 러시아와 교전하게 된다), 리투아니아는 한 달 만에 봉쇄를 해제했다.

하지만 갈등의 씨앗은 여전하다. 러시아는 칼리닌그라드에 북·서유럽 전역을 사정거리에 둔 미사일 ‘이스칸데르’를 배치해 뒀다. 서유럽 강대국들은 물론이고, 칼리닌그라드와 국경을 맞댄 발트3국과 폴란드 역시 이를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여긴다.

발칸반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면서 서방은 러시아 포위망을 확충하기를 바란다. 발칸반도에서 이는 겹겹이 얹힌 민족 갈등에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

최근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는 코소보와 세르비아 간의 갈등에 개입하며 “발칸반도 서부 국가들이 모두 유럽연합에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한 세르비아를 서방 동맹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랫동안 발칸반도는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다투는 무대였다. 냉전 종식 후 서방은 나토 동진(東進)의 일환으로 이곳에 개입했다.

1990년대에 발칸반도의 옛 유고슬라비아 영향권에서 민족 분쟁이 벌어지자, 나토는 여기에 재빨리 개입했

다. 나토는 코소보를 지원한다며 세르비아를 맹폭격했고(관련 기사: 본지 53호 ‘1990년대 발칸 전쟁: 피를 부른 나토의 ‘인도주의적 개입’), 지금도 이 지역에 나토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하지만 나토의 개입은 당시에 도 문제를 해결하는커녕 심화시켰고, 러시아는 서방의 위협을 절감하게 됐다.

지금 서유럽 강대국들은 러시아의 영향력을 발칸반도 바깥으로 밀어내고 흑해·카스피해로 진출할 교두보를 확보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여러 갈래로 복잡하게 얽힌 이 지역의 민족 갈등을 유혈낭자한 전면전으로 키울 수 있다.(관련 기사: 본지 427호 ‘나토가 코소보와 세르비아 간 갈등에 개입할 준비를 하다’)

동지중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근 지역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지역 강국들 사이의 기존 긴장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7월 중순, 그리스와 튀르키예(터키)의 전투기들이 에게해에서 서로 견제하며 비행 훈련을 벌였다.

양국은 키프로스 해역에 매장된 천연가스에 대한 통제권을 두고 여러 해 동안 으르렁댔다. 그리스는 키프로스·이스라엘·이탈리아·이집트 등과 이 해역의 제해권을 갈라 먹고자 했다. 튀르키예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인데, 튀르키예가 동지중해를 주도하는 강대국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반면 튀르키예는 1974년 키프로스를 침공해 북(北)키프로스를 ‘독립’시킨 이래 이 해역에서 자기 이해관계가 침해받는 것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해 왔다.

튀르키예·그리스 모두 나토 회원국이고, 나토의 맹주인 미국은 이들의 갈등이 적당히 봉합되기를 바란다. 대(對)러시아 포위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사태는 미국의 바람과 다르게 흘러갔는데, 이는 천연가스가 제국주의 갈등의 무기로 활용되는 것과 연관 있다.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서유럽 강대국들은 러시아를 대체할 공급원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래서 동지중해의 천연가스, 그리고 이 해역

▶ 7면으로 이어짐



영화평 | 〈그대가 조국〉

조국의 억울함이 그의 정치를 미화하지 못한다



올해 독립영화 중에서 가장 크게 흥행한 작품은 다큐멘터리 영화인 '그대가 조국'이었다. 흔히 않게 무려 30만 명이 봤다고 한다.

이 영화는 제목처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지자들이 만든 것이고, 다른 수많은 지지자들을 위로하는 영화다.

이 영화는 조국 논란과 사건에 대한 전체적 성격 규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 과정을 따라가며 조국이 억울한 희생자임을 호소한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이 영화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 편향된 증인들의 주관적 증언(가령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2심까지 유죄를 받은 최강욱 의원), 지엽말단적인 사실들에 대한 의혹 제기 등을 반복하다가 영화는 끝난다.

조국 전 장관은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수시로 등장해 자신의 소회를 털어놓고, 장관 임명 전 기자 간담회와 청문회 장면 등도 비중 있게 부각되지만, 조국 본인이 왜 자기 아내의 재판에서조차 묵비권을 그토록 많이 행사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스펙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기소된 15개 혐의 중 11개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국 딸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로 판정됐는데, 조국 딸이 하다못해 동양대에서 자원봉사를 했다는 목격자 한 명을 재판에서도, 이 영화에서도 제시하지 못한다.

무죄를 받은 혐의들도 그리 자랑할 만한 것은 못 된다. 가령 사모펀드 투자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은 재판부가 그 돈을 차명 투자에 대한 수익으로 봤기 때문이다. 정치적·도덕적으로는 불명예스러운 무죄다.

조국 전 장관은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그 자리는 고위 공직자



부모가 '스펙 품앗이' 등의 도움을 주는 것은 보통의 청년들이 꿈도 못 꿀 일이다

들의 인사와 기강 문제를 다루는 자리였다. 그런데 바로 그 민정수석비서관 자리에 있으면서, 스스로 '고위 공직자의 백지신탁 의무'(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업무상 권한을 이용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 등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것)를 위배한 셈이었다.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재판이 열리면 이 문제가 다뤄질 것이다.

실망 또는 확증편향

나름대로 언론 보도와 재판 과정·결과들을 살피며 중립적으로 사안을 보려 하고 그 과정에서 혹시나 놓친 증거나 의혹, 반론 등이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영화를 본 사람들에게는 실망이 클 것이다.

조 전 장관의 무죄를 주장하는 영화가 정작 진실 규명이나 해명에는 너무 무성의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눈길을 끈 것은 동양대학교 휴게실에서 발견된 컴퓨터(표창장 위조 관련 파일들)의 증거 능력이 없다는 부분이다. 이 주장은 실제로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화제의 그 컴퓨터를 2심 재판부가 증거에서 배제한 것이다.

그러나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이미 알고 있다. 그렇게 해도 결과가 달라지

지 않았음을. 이유는 그 컴퓨터가 정경심 전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 유일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화는 유죄 판결 후 출연자들이 재판부·검찰이 모두 기득권의 편이라고 한탄하는 장면을 보여 줄 뿐, 나머지 증거들을 반박하는 노력을 하지는 않는다.

이 영화는 조국·정경심 부부가 법적·정치적·도덕적으로 무죄임을 이미 확신하는 조국 전 장관의 지지자들에게 새로운 확신 또는 확증편향을 주는 영화다.

결국 조 전 장관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프로젝트의 출발점으로 읽힌다.

법적이 아니라 정치적

조국 전 장관 문제가 지지층이 이반하는 정치적 사건으로 부각된 것은 조 전 장관 일가의 행동이 계급 불평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조국 전 장관이 어쭙잖게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며 변호론을 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재벌과 관료층, 기득권의 편이고, 자신들의 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한다"(강령)고 애기해 왔다. 비록 그 사이에 기반과 실천이 지배계급 쪽으로 확실히 이동했지만 말이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는

"고학력, 고소득자, 소위 부자라고 하는 분들 중에는 우리[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다"고 말해 그런 변화를 인정했다.

사회주의자를 자처한 조국 전 장관이 (부유층의 관행대로) 자신의 지위와 재산을 이용해 자기 자녀들에게 계급적 특권 대물림을 하려 한 것은 현행법 위반 여부로만 따질 문제가 아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 두 교수 부모가 고위 전문직 부모들과 '스펙 품앗이'를 하고(그중 일부는 허위로 조작), 손쉽게 스펙을 마련해 주는 것은 보통의 청년들이 꿈도 못 꿀 일이다.

이런 언행불일치가 드러나도 반성하지 않고, 그저 '기득권층'과 검찰과 재판부 탓만 해대는 구태의연함이 '내로남불'이라는 배신감과 환멸을 자아낸 것이다.

국민의힘과 달라 보여서 민주당과 문재인·조국을 지지한 사람들에게, 왜 우리는 국민의힘처럼 기득권을 누리면 안 되느냐고 되물은 격이니 말이다.

초기에 배신감을 느낀 사람들의 대다수는 박근혜를 퇴진시킨 촛불운동 이후 문재인과 조국에게 기대를 걸었던 청년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을 붙잡으려고 윤석열이 공정을 앞세웠으나 신기루에 불과했음이 금세 드러나 보통의 청년들은 또다시 정치적으로 방황하고 있다.

이 영화에서 조 전 장관측 증인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자 대학교수, 전직 청와대 수석이자 현 광주시장, 광고회사 대표, IT 회사 대표 등이다.

물론 이런 구성은 덕망있는 사람들의 증언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작위적으로 선정된 것일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급 청년들 다수가 "그대가 조국"이라는 호명에 응하는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김문성

▶ 6면에서 이어짐

을 지나는 가스관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다.

튀르키예는 유럽행 천연가스의 통제권을 두고 러시아와 갈등하는 사이지만(2020년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전쟁에서 튀르키예와 러시아는 서로 다른 편을 들었다), 서유럽에 대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러시아도 가까이해 왔다.

프랑스 같은 서유럽 강대국은 이를 불편히 여겨 튀르키예보다는 그리스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연합의 주도자들은, 튀르키예가 정도 이상으로 었나가 서유럽의 불안정을 키우는 상황은 바라지 않는다.(유럽연합은 튀르키예가 중동과 서유럽 사이의 '방벽' 구실을 하기도 바란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이런 갈등들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더 커지고 있다.

강대국들은 자신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데에 유리한 관점으로만 이런 갈등들을 대할 것이고, 따라서 갈등을 완화시키기는커녕 키우기 십상이다. 특히 에너지 위기 등 중첩된 위기가 날로 첨예해지는 지금은 더더욱 그렇다.

우크라이나를 넘어 곳곳을 더 위험하게 만들 책동 일체에 반대할 이유가 점점 늘고 있다.

김준호

이 기사를 읽고, '갈등 커지는 곳에 무기 파는 '죽음의 상인' 한국도 보시오.
wspaper.org/article/28181



탈북어민 강제복송 논란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보기

임준형

이 글은 8월 4일 노동자연대TV 온라인 토론회 발제 내용을 평어체로 바꾼 것이다. (QR코드로 영상 보기)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살인 혐의를 받는 탈북어민 2명을 강제 복송한 사건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정치 세력들의 입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탈북어민 강제복송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우파의 위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탈북어민 강제복송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우파가 강제복송을 “반인륜적 범죄”라고 비난하며 탈북민들을 위하는 양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우파 정부들은 탈북민을 정치 상황에 따라 이용하며 냉혹하게 다루었다.

이명박 정부는 중국 등 제3국을 떠도는 탈북민 8만여 명을 국내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3국에 수용소를 지어 수용하려 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탈북민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했고, 그 여동생은 허위 자백을 강요한 뒤 추방했다. 윤석열은 바로 이 조작의 실질적 책임자인 이시원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부는 강제복송이 국제법상 난민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인천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미얀마인들의 입국을 거부해 강제송환 위험에 내몰았다. 이들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정적 공격용으로나 들먹이는 것이다.

우파는 대부분 탈북민의 인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지율 하락에 대응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탈북어민 강제복송 쟁점을 이용할 뿐이다.



강제복송되는 탈북어민. 탈북민이 어디에서 살지는 무엇보다 그들 자신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민주당의 위험천만한 사법 민주주의 부정

그러나 우파의 공격이 위선적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탈북어민들을 강제 복송한 것은 잔혹한 짓이다.

복송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거슬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탈북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점은 여야 모두 인정하는 팩트다. 얼마 전 통일부가 공개한 복송 영상을 보면, 포승줄에 묶여 눈이 가려진 채 호송되던 탈북어민 한 명이 판문점 분계선 앞에서야 복송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저앉아 저항한다.

친민주당 인사 일부는 복송이 당사자 의사를 거스른 것이었다는 점마저 흐리려 한다. 그러나 사건 직후인 2019년 11월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당시 통일부 장관 김연철은 탈북어민들이 자필 진술서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점, 남한 경비정에 나포된 이후로 일관되게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심지어 복송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는 점도 인정했다.

민주당은 복송을 정당화하려고 탈북어민들이 흉악범이라고 주장한다. 도피 목적의 귀순이므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살인범을 추방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첫째, 탈북민의 ‘순수성’을 의심하며 선별 수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런 의심 때문에, 탈북민은 남한에 오면 국정원 소속 기관인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조사를 거친다. 이곳에서 탈북민들은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고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국정원·검찰·경찰 등의 합동 조사를 받는다.

이 기관의 원래 이름은 중앙합동신문센터였는데, 인권 침해 사건들이 폭로돼 악명이 높아지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실상은 변하지 않았다.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가 바로 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반년이나 구금돼 협박과

가혹 행위를 당했었다.

탈북민은 이 기관을 나온 뒤에도 바로 그 ‘진정성’ 의심 때문에 무려 5년간 ‘보호담당관’이라는 이름의 경찰에게 감시당한다. 이는 탈북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탈북민에 대한 편견을 부추긴다.

둘째, 탈북어민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혐의일 뿐이다. 자백만으로도, 또는 재판을 하지 않고도 정부가 범죄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민주적 권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물론 탈북어민들이 무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들이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고 하니 말이다. 그러나 사실상 다른 증거는 없다. 탈북어민들을 살인범이라고 단정하는 건 다른 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범죄 사실을 확정할 수 있다는 위험한 논리다.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들의 자백 강요 같은 인권 침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도 자백만으로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

탈북민·난민 선별 논리

탈북어민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 범행이 이뤄졌다는 설파는 남한이 나포해 확보한 상태였지만 이에 대한 조사도 없었고, 북한에 수사 협조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

탈북어민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진술을 한 적도 없고, 독립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적도 없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도 못했다. 오직 외부와 격리된 곳에서 자신에게 적대적인 국가기관들의 조사를 받았을 뿐이다.

민주당은 범행이 북한에서 벌어져 증거나 증인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재판을 하면 무죄가 나왔을 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재판을 하지 않고 정부가 범죄 사실을 확정하겠다는 위협한 발상이다. 심지어 독재 정권하에서 벌어진 공안 탄압 사건조차 재판을 거쳤는데 말이다.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범죄 사실을 확정할 수 있다면 정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 개인들을 손쉽게 탄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법 민주주의, 즉 민주적 권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셋째, 설령 범죄 사실이 있다 해도 자기방어에 불리하지 않은 곳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는 스스로를 방어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매우 억압적인 북한에서는 이런 권리를 보장받기가 훨씬 어려울 것이다. 탈북어민들은 어찌면 이런 점 때문에 귀순을 신청한 것일 수 있다.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은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 개인을 송환 또는 인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연쇄살인범이라 해도 사법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예외론을 용인하게 되면 민주적 권리를 일관되게 방어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면 힘 없고 돈 없는 보통 사람들이 부당한 일을 겪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 예외론의 문제점은 국가보안법이 잘 보여 준다.

민주당은 강제북송을 하지 않았다면 흉악범이 무죄로 풀려나 거리를 활보했을 거라며 범죄에 대한 혐오를 부추긴다. 그러나 범죄자는 교화될 가능성이 없고 사회로 나오면 해를 끼칠 것이라는 주장은 범죄의 사회적 원인을 감추는 보수적 편견을 키울 뿐이다.

탈북어민 강제북송을 정당화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탈북민을 포함한 난민에 대한 편견을 이용한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고약하다.

난민 중 범죄자나 테러리스트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은 각국 정부가 난민을 배척하는 핵심 논리의 하나로 이용해 왔다.

위험인물을 선별해야 한다며 자의적으로 난민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추방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난민 신청자들이 별 근거도 없이 감옥 같은 외국인보호소에 갇히거나 공항에 억류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외국인 범죄율은 내국인에 비해 더 낮다. 2011~2019년 인구 10만 명당 외국인 범죄율은 내국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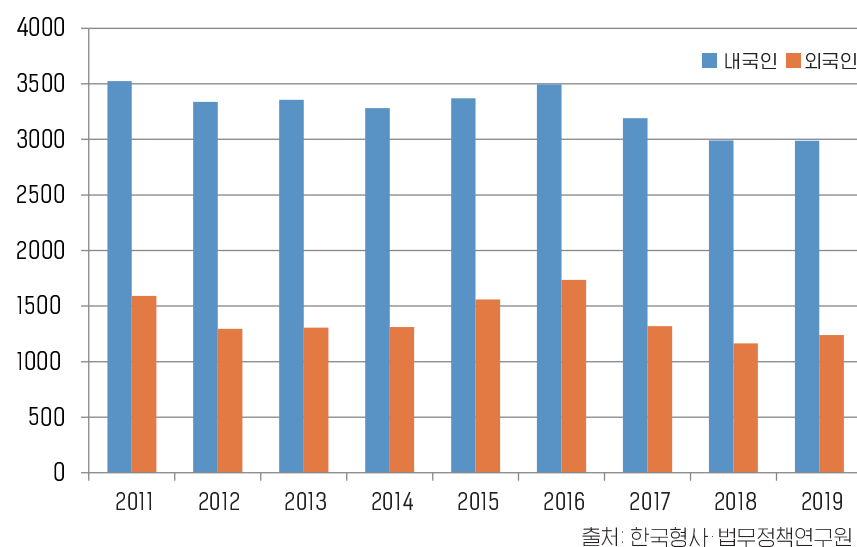
한국 정부는 난민에 대한 편견과 난민의 취약한 처지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기도 한다. 2015년 11월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가 프랑스 파리의 축구 경기장을 공격한 일이

있었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는 이 비극을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테러방지법 제정의 불쏘시개로 이용했다. 당시 국가정보원은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시리아인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시리아 난민들이 테러리스트인 양 인상을 풍기고 테러방지법 제정 분

위기를 조성하려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주장대로 범죄 혐의만으로 탈북민 추방을 정당화한다면 탈북민과 난민들은 더욱 취약한 처지로 내몰릴 것이다. 또한 국가가 이 취약한 처지의 사람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의적으로 이용하기도 더 쉬워질 것이다.

내외국인 범죄율 동향 (인구 10만 명당 검거 인원 기준)



좌파들의 태도

그런데 아쉽게도 주요 좌파 정당들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문제에서 사실상 민주당을 방어하거나 침묵하고 있다. 진영논리와 함께, 남북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 작용하는 듯하다.

7월 25일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 위원장은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송어부사건은 당시 국민의힘도 양해했었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제도의 미비가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자민통계 언론인 〈민중의소리〉는 7월 7일 사설에서 "정치적 판단의 최고 영역이라고 할 남북관계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이용해 전 정부와 야당을 '친북세력'쯤으로 몰아가는 건 심각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의 공통점은 당사자인 탈북 어민의 의사, 그들에게 제기된 살인 혐의의 진실, 북송의 진상, 그리고 피의자 자기방어를 위해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할 민주적 권리에 대해서는 도통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당사자들

에게는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말이다. 과연 제도의 미비와 남북관계에 대한 정치적 판단 때문에 인권과 민주적 권리를 희생시켜도 되는 것일까? 여야가 합의하면 진실이 되는 것일까?

한반도는 제국주의 강대국들로 인해 그 주민들의 의사를 거스른 분단을 겪고 전쟁까지 치렀다. 남북 간의 긴장 고조는 남북 모두에서 인권과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는 빌미가 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염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며 분단과 남북 갈등의 희생자 중 하나인 탈북민의 인권이 짓밟히는 걸 용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것은 평화를 원해서, 그리고 이산가족이나 탈북민 같은 사람들의 처지가 나아지길 원해서일 것이다. 그러니 좌파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같은 문제를 외면하면서, 남북 갈등의 희생자였던 탈북민들이 이번에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되도록 방관해선 안 된다.

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한 다면서도 한반도 긴장을 낳는 제국주의에는 결코 저항하지 않는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한미 군사훈련을 지속해 북한의 불만을 사고 있었다. 북한 당국은 문재인을 향해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이라고 했고, 결국 몇 달 뒤인 2020년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점들에 비춰 봤을 때 민주당 세력에 공조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탈북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좌파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

지금 많은 좌파 단체들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같은 중요한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 주요 조직인 민주노총이 침묵하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또, 이 사건이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이용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난민·이주민 단체들이 무관심하거나 침묵하는 것도 아쉽다.

노동쟁의 옥죄는 손배·가압류 철회하라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손해배상·가압류 문제가 다시 부상했다.

51일간의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은 상당한 정치적 효과를 내며 생계비 위기에 맞선 대안을 보여 줬다. (관련 기사: 본지 426호 [이렇게 생각한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며 생계비 위기의 대안을 보여 주다)

윤석열 정부는 7월 22일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이렇게 밝혔다. “불법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대우조선 사용자 측도 파업 피해액이 7000억 원에 이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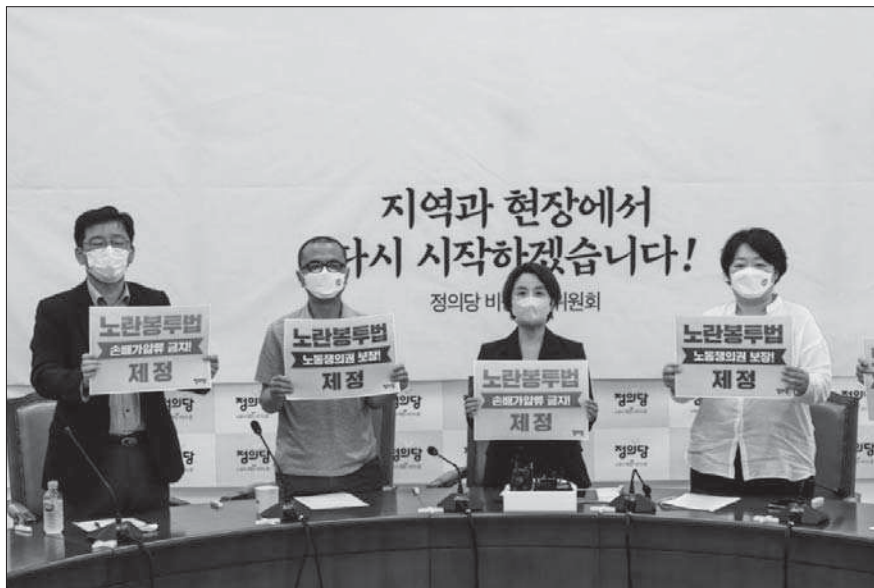
하청 노동자 파업으로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윤에 타격을 입은 데 대한 보복을 예고한 것이다. 또한 손배가압류로 투쟁에 족쇄를 달아, 예고되는 임금 투쟁들을 미리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살인적인

손배가압류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악랄한 수단이다. 파업이 이윤 생산을 멈춤으로써 사용자를 압박하는 것이므로, 파업에 대한 손배 청구가 허용되는 것 자체가 파업권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다.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 2012년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가 사용자 측이 가한 천문학적 손배가압류 압박에 죽음으로 향했다.

그럴 때마다 손배가압류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신원보증인에 대한 책임 제한, 최저 생계비의 압류



손배가압류 금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대중적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대상 제외 등 보잘것없는 개선이 다였다.

2020년 현재 노동쟁의에 청구된 손해배상 금액(누적치)은 658억 5000여만 원에 이른다.(손잡고, 2020 노동권과 손배가압류 소송기록 자료집)

2020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10년 만에 복직했지만, 손배가압류로 반토막 난 첫 월급 봉투를 받아야 했다. 2009년 공장 점거파업을 이유로 노조와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손배액이 44억 5000만 원인데, 여기에 지연이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20년에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할 손배액이 무려 128억여 원이었다.

현대차 비정규직, 톨게이트, 유성기업, 아사히글라스 등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은 평생 만져 보지도 못한 액수의 ‘손배 폭탄’에 가계가 파탄나고 그 탓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생이별을 하거나

이혼을 하는 등 고통을 겪었다.

최근엔 CJ대한통운 사용자 측이 올해 초 택배 파업 본사 점거 투쟁을 이유로 노동자 88명에게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이트진로 사용자 측도 화물 노동자 11명에게 28억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정의당은 노동쟁의에 손배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요즘 정의당이 노동 문제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좋은 변화다.

(노무현 정부 시절 배달호·김주익 열사의 죽음에 원죄가 있는) 민주당도 뛰어들었다. 국회 환노위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겠다고 한다.

노란봉투법

그러나 일명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

용차 파업 이후로 19대 국회, 20대 국회에서 연달아 복수의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반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지금 “불법 파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은 매우 제한적이다. 가령, 이윤에 타격을 가하는 파업 투쟁에 곧잘 꼬리표로 달리는 “불법”, “폭력” 투쟁은 예외로 두자거나, 손배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청구 금액에 상한선을 두자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여야 협상으로 손배가압류 금지라는 목표가 이뤄질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제정 등을 제안하며 그것이 진정한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정치적 투쟁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가 말한 정치가 노동자들은 잠자코 있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나서서 해결하자는 것이라면 손배가압류 금지라는 목적을 성취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껏 여러 개혁 입법을 국회 협상에 의존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결과적으로 입법이 된다 해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누더기가 될 공산이 크다.

노동자들을 옥죄는 손배가압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정부와 사용자들에게 압력을 가해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느낄 만큼의 광범한 대중 투쟁의 힘이 필요하다. 마르크스가 말한 정치, 즉 전 계급적 투쟁이 중요하다.

박설

▶ 9면에서 이어짐

이주의 자유와 국제주의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들을 강제 복송한 이유가 남북관계를 고려한 것이든, 다른 난민 배척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든, 이번 사건은 민주당 세력이 그 목적을 위해 얼마든지 탈북민을 희생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를 비난하는 우파도 탈북민을 장기판의 말로 여기기는 마찬가지다.

혁명적 좌파는 이를 폭로하며 탈북민을 방어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좌파들의 외면과 침묵은 우파들이 ‘인권 운운하는 좌파의 위선’이라며 파고들어 탈북민을 이용할 기회를 열어 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탈북민 문제가 우파

전유 쟁점처럼 돼 있는 상황인데 말이다.

탈북민은 제국주의 열강의 점령, 전쟁, 그 뒤로 이어진 남북 대결, 미국의 대북 압박으로 점철된 한반도 역사의 희생자들이다. 탈북민들은 자유로운 왕래가 가로막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 남한에 입국하는 과정에서조차 잠재적 간첩이라는 의심 받으며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다. 남한 사회로 진입하고 나서도 늘 순수성을 의심받으며 심각한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고, 북한에 남은 가족들과 교류하기 힘들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작 남북 지배자들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국경에 별로 제약받지 않는다. 보통의 탈북민들이 목숨 걸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널 때, 김정은은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며 스위스에서 호화로운 유학 생활을 했다.

1989년 1월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이 방북해 북한 정부와 금강산 사업에 합의하고 돌아온 것은 노태우 정부의 격려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황석영 작가, 문익환 목사, 임수경 학생, 문규현 신부의 방북은 혹독한 처벌을 받았다.

지배자들이 신성불가침의 주권으로 여기는 국경 통제는 그들의 권력을 강

화할 뿐 보통 사람들을 더 취약하게 만든다. 당국의 국경 통제가 아니라 이주의 자유를 지지해야 한다. 탈북민이 남한에서 살지, 북한에 돌아갈지, 혹은 제3국으로 떠날지는 무엇보다 그들 자신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

그래야 탈북민의 고통을 덜 수 있다. 또, 지배자들이 탈북민과 난민 등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노동계급을 분열시키는 것에 맞설 수 있다. 남북 대중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유대를 맺을 수 있어야 장차 남북 노동자들이 단결해 아래로부터 저항에 나서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대우조선 하청 파업과 원하청 연대

노동자의 단결은 어떻게 가능한가

대우조선 정규직 노조가 지난 7월 21~22일 실시하다 중단된 금속노조 탈퇴 찬반 투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그 투표는 하청노조 파업에 반대한 우파적 대의원들이 발의했다. 하청노조가 속해 있는 금속노조를 탈퇴하겠다는 압박을 가해 하청노조를 굴복시키려는 술책이었다.

그러나 정규직 조합원 다수의 정서는 호기롭게 총투표를 추진한 우파의 예상을 빗나갔다. 개표가 3분의 1가량 진행된 단계에서 이미 반대표가 찬성표를 앞섰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해당 선거구는 우파가 밀집해 있는 곳인데도 그랬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선관위 측은 (찬반 양쪽 모두에서) 무더기 표가 나왔다는 이유를 들어 개표를 중단시켰다.

방금 2주간의 여름휴가가 끝나고 다시 공방이 시작됐다. 노조 지도부는 중단된 개표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재투표를 하자며 맞서고 있다.

잠재력

투표 중에 이미 드러난 진실은 정규직 노동자 다수가 비정규직을 내치자는 선동에 동조하지 않고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연대 잠재력에 대한 일각의 비판이 틀렸음을 보여 준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임금·조건 공격의 완충지대로 삼아 자기 잇속만 챙긴다고 회의하기 일쑤다.

아마도 그들은 대우조선 정규직의 우파적 일부가 (사측과 협력해) 하청노조 파업에 비난을 퍼붓고, 조직적으로 반대 시위를 하고, 농성장을 침탈하며 난동을 폈을 때, '역시 정규직은 안 돼' 하는 결론을 내렸을지 모른다.

그러나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규직 노동자의 다수는 우파의 선동에 호응하지 않았다.

정규직 일부가 비정규직을 배척한다고 해서 거기에 물질적 근거(이해관계의 대립)가 있는 것이 아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비정규직을 잘라 정규직 일자리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쉽게 해고한 여세를 몰아



원하청 연대가 의식적으로 조직됐다면, 하청노조에 훨씬 더 유리한 정치적 지형이 형성됐을 것이다

정규직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다.

만약 이번엔 원하청 연대가 의식적으로 조직됐다면, 하청노조에 훨씬 더 유리한 정치적 지형이 형성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투쟁이 더 나은 성과를 냈다면, 그것은 대우조선의 하청 노동자들 뿐 아니라 원청 노동자들, 더 나아가 한국의 전체 노동자들에게 이로웠을 것이다.

불가피하지 않은 타협

아쉽게도 이번 투쟁에서 그 같은 원하청 연대는 이뤄지지 못했다.

정규직 노조 집행부는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요구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우파적 조합원들의 반대 시위와 난동에 맞서지도 않았다. 그저 찢찢맸다.

후자의 압력을 부담스러워해,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지침을 어기고 민주노총 주최 공장 앞 연대 집회에 불참하기까지 했다.

더 나아가, 하청노조에 농성 해제를 요구해 사실상 파업 중단을 압박했다. 이는 우파 조합원들의 기를 더 살려 줬다.

흔히 노조 지도층 사람들은 모름지기 노동조합이란 후진적 견해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자칫 노조가 분열할 수 있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후진적 의견에 도전해 연대를 충분히 설득하지도 않은 채 이런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불가피하지 않았던 타협을 조합원 탓으로 돌리는 군색한 변명일 뿐이다.

이 점에서 정규직 노조 내 좌파 활동가들도 아쉽다. 분명 그들은 우파적 반동에 동조하지 않았다. 하지만 연대 건설의 노력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저 중간에서 부유하는 노동조합 내 온건한 부위에 타협하며, 평화적 협상을 통한 해결을 주문했다.

노조 집행부가 우파 조합원들을 추수하고, 좌파 활동가들이 노조 집행부를 추수하는 연쇄 악순환이 벌어진 셈이다.

단결은 쟁취하는 것

온건한 정규직 활동가들은 하청노조가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너무 세게 싸워” 갈등을 키운 게 갈등의 출구를 막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번엔처럼 양극화가 첨예해진 상황에서는 현실론을 내세워 “적당히” 하라거나 “무리한 투쟁”을 자제하라는 압력이야말로 노동자들을 분열과 혼란으로 이끌었다.

정부와 사용자, 언론들은 이런 틈을 비집고 ‘과도한 투쟁으로 다 공멸하게 생겼다’며 이간질하고, 투쟁을 이끌 태세가 돼 있는 전투적 부위를 고립시키

곤 한다.

단결은 여러 견해를 통합해 중간에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 현실의 여러 압력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논쟁하고 투쟁 속에서 힘껏 연대할 때 강화된다. 즉, 좌파가 싸워서 입증하고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엔 진정 필요했던 것은 점거 농성을 굳건히 방어하며, 사업장 안팎에서 노동자들의 광범한 연대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협소한 자기 부문의 시야에서 볼 일이 아니다.

지난 수년간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잖은 활동가들이 내 코가 석 자라는 이유로, 내가 속한 노조나 부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임금이 깎이는 고통을 눈감아 왔다.

대우조선에서는 좌파 집행부가 들어 서기도 했지만, 그때도 하청 노동자 투쟁에 대한 연대는 노조 기구 내 담당자의 몫으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이런 칸막이화는 관료주의의 주요 특징 중 하나다.)

전체 노동계급의 단결을 그저 추상적 원칙으로만 취급한 채, 조합주의와 부문주의에 갇혀서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 노동자들의 단결을 쟁취하고자 분투하는 투쟁적 계급정치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반년

세계 곳곳에서
제국주의적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김인식

미국·나토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제국주의적 충돌이 장기전의 양상을 띠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극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식량·에너지·금융에 악영향을 미쳐 전 세계 17억 명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고, 특히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유엔의 '글로벌 위기 대응 보고서').

전황은 본지가 그동안 힘주어 해 온 두 가지 주장을 확증해 주고 있다. 첫째,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적 전쟁이다.

둘째, 이 전쟁은 발칸반도와 동지중해에서부터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세계적 규모로 제국주의적 경쟁을 격화시키며 세계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은 제1차 세계대전의 대학살을 떠올리게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주로 참호에서 벌어지고(참호전), 포탄이 상대방 참호를 향해 끊임없이 날아오며, 수백 제곱미터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백 명이 죽고 다친다. 참호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병사들이다. 현재까지 전쟁의 최전방인 돈바스는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공업 지대여서 민간인들도 끔찍한 희생을 치르고 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돈바스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일상이다. 그러나 전선 자체는 교착상태이므로 후방의 권력자들에게는 별 이상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독일의 반전주의 작가 에리히 레마르크(1898~1970)의 《서부 전선 이상 없다》라는 제목의 의미처럼 말이다.

전쟁 초기에 언론들은 러시아 점령군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용기와 결연한 행동을 예찬했다. 그리고 4월 초 러시아 군대가 키예프(키이우) 북부에서 굴욕적으로 철수하자 축하를 불렀다.

언론들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가 2014년 이래 점령하고 있는 지역으로까지 진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들켰다. 또,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의 통화와 경제가 급격하게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관측들은 다 틀렸음이 드러났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다연장 로켓 발사대 하이마스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는 이 전쟁이 제국주의 대리전임을 보여 준다

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러시아 장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강한 회복 탄력성을 보여 줬지만, 제한된 지역에서의 반격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게다가 병력 손실도 심각하다. 6월 초 젤렌스키의 선임 자문관 미하일로 포돌리야크는 매일 우크라이나군 100~200명이 전사하고 800명이 부상당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매달 3만 명 안팎이 전투를 치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서방의 제재는 러시아 경제를 실제로 타격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러시아 경제가 6퍼센트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 기업들은 예비 부품, 원료, 기술 제품 등의 심각한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붕괴한 것은 아니다. 루블화 가치가 올랐고, 중국·인도·브라질 등이 제재에 불참하면서 제재의 충격이 완화됐다.

승인했다. 정보와 안보, 우크라이나 정부 유지에 필요한 자금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지원인데, 가장 큰 몫은 단연 무기다.

5월 말까지 총 37개국이 65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여기에 한국도 포함돼 있다). 러시아의 2021년 국방비 지출(659억 달러)과 맞먹는 액수다.

6월 미국은 첨단 무기 시스템인 하이마스(다연장 로켓 발사대)를 우크라이나 군대에 제공했다. 나토가 기존에 제공한 로켓보다 사거리가 더 길다. 그러나 하이마스 공여 대수와 사거리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 정부다. 바이든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로켓 시스템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즉, 미국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확전이 아니라 소모전을 택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결연한 항쟁을 결정하고 “자유 진영”이 이를 지지한다는 전쟁 프로파간다는, 나토가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피로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현실을 가릴 수 없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나토는 러시아 국경 지대에 주둔 병력을 늘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사태 변화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정부들이 나토 가입을 신청했고 나토가 이를 승인했다는 점이다.

두 국가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중립”과 “비동맹 외교” 정책을 포기한 “역사적 결정”이다. 스웨덴은 1812년 이래 군사 동맹(과 전쟁)에 관여하지 않았다. 핀란드도 제2차세계대전 이후 마찬가지로 정책을 추구했다(“핀란드화”). 핀란드화는 냉전 시기에 약소국이 자국의 주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인접한 강대국의 외교 정책을 반대하지 않는 외교안보 노선을 가리키는 말이 됐다.

핀란드·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정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자국의 안보를 위협했다며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사실 사브(SAAB) 같은 세계적 무기 업체가 있는 스웨덴과, 징병제와 “통합 방어” 독트린을 유지해 온 핀란드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수십 년 동안 나토에 접근하고 있었다.

“전쟁이 수년 걸릴 수 있다”

서방의 어조는 전쟁 초반과 달라졌다. 6월에 나토 사무총장 스톨텐베르그는 장기적인 소모전을 언급했다. “우리는 이것[우크라이나 전쟁]이 수년 걸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다. 그럴수록 서방은 전쟁에 더 깊이 관여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들이 매일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다. 전쟁 초기에는 주로 동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옛 소련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자국이 생산한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155mm 곡사포, 방공 시스템, 전차 등 중화기들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5월 초 미국 의회는 400억 달러(약 51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사진 출처 UNOCHA/Serhi Korovany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모전이 되면서 우크라이나는 끔찍한 희생을 치르고 있다

사실 두 국가의 1995년 유럽연합 가입이 “중립” 포기를 향한 중요한 조처였다. 나토와도 협력적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핀란드·스웨덴의 군대는 보스니아·코소보에서 아프가니스탄과 리비아에 이르기까지 나토의 개입과 점령에 참여했다.

지금 제국주의(간) 충돌은 국제정치상의 “중립”이 설 자리를 좁히고 있다. 푸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자국 요구를 관철시킬 때가 됐으며 전쟁을 감행했다. 나토는 러시아 북부에 새로운 포위망을 구성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나토가 러시아의 북쪽 국경 지대 1300킬로미터를 새로 확보했다는 뜻이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으로 동맹은 러시아의 콜라반도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것이다. 콜라반도는 약 170킬로미터에 이르는 핀란드의 동쪽 국경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광활한 땅이다. 러시아는 그곳에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 핵탄두를 배치하고 있다. 또, 북극해를 주요 활동 공간으로 삼는 러시아 북해함대의 모항이기도 하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으로 나토 동맹은 남쪽으로는 발트해의 끝부분을 얻게 될 것이다. 발트해는 나토의 몇몇 취약한 회원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뿐 아니라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국경을 맞대는 전략적 수로다.

“현재 나토의 병력 증강은 수왈키 갭을 이용한다. 러시아는 폴란드와 리투

아니아를 갈라놓는 이 좁은 회랑을 차단하려 할 수 있다.”(《워싱턴 포스트》 2022년 5월 19일자)

아시아

미국·나토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미국의 좀 더 중요한 전략적 과제는 여전히 중국과의 제국주의적 경쟁이다. 이 경쟁은 인도·태평양에서의 군비 증강, 전쟁도발 위협, 다양한 긴장 등 가연물을 쌓고 있다.

동시에, 한국을 비롯해 지정학적 활성 단층대에 있는 긴 국가들은 중국과 미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면서 불안정에 빠지고 있다.

5월 초 바이든의 아시아 순방은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 줬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할 것이라

는 바이든의 발언은 계산된 도발이었다.

그가 그 지역을 떠난 뒤에 바로 답이 돌아왔다. 중국과 러시아가 폭격기와 전투기를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으로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넘나드는 무력 시위를 벌였다.

미국은 동맹을 구축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고자 한다. 물론 미국이 동맹국들에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것은 많지 않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은 군사력으로 벌충된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대중국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쏟아붓는 돈은 정신 나간 수준이다. 중국도 전력을 확대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 인류를 종말로 몰아갈 수 있는 악몽 같은 경쟁이다.

이런 점에서 5월 26일 사건은 매우 아찔했다. 중국 J-16 전투기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오스트레일리아 P-8 정찰

기에 초근접 위협 비행을 하며 심지어 쇠파이프(알루미늄 파이프 포함)를 뿌렸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는 6월 6일 이렇게 썼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의 ‘오른팔’이 되고 싶어 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부보안관’을 자처한다. … 워싱턴의 ‘폭력배’로 행동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부를 얻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더 최근에는, 8월 2일 미국 하원의장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대만을 포위해 침공하는 모의 훈련을 했다.(4면에 실린 ‘미 하원의장 대만 방문 이후: 긴장이 감도는 대만해협’을 보시오.)

나토는 6월 말 마드리드 정상회의에 한국·일본·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를 초청했다.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세계적 경쟁의 한 부분일 뿐이고, 제국주의 경쟁 블록이 (아직은 완전체가 아니고 내적 긴장이 있지만)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파이낸셜 타임스〉 외교 문제 수석 칼럼니스트 기디언 래크먼은 이렇게 썼다.

“미국은 러시아·중국 축과의 대결을 준비하기 위해 또다시 민주주의 동맹을 모으고 있다. 핵전쟁의 위험이 또다시 국제 정치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다시, 양쪽이 환심을 사려고 집중하는 거대한 비동맹국 블록 — 오늘날에는 대개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 이 존재한다.”(2022년 6월 6일자)



사진 출처 NATO(틀리거)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된 한국·일본·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 정상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은 동맹을 결집시키려 애쓰고 있다

9 772005 821003 32



국제주의적 좌파는 “주적은 국내에 있다”는 교훈에 따라, 제국주의 전쟁과 경제 위기의 대가를 치르는 평범한 청년과 노동계급 속에서 한국 정부의 나토 지원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2021년에 새로 가동을 시작한 신서천화력발전소

전쟁과 에너지 위기 속에서 화석연료 사용 늘리는 지배자들

오선희

지난해 11월에 열린 26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6)는 기후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지적한 것처럼 “말잔치”에 불과했다.

그런데 주요 선진국 정부들은 그 알량한 말잔치마저 없었던 일인 양 노골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석탄 수입에 차질이 생기자 이런 추세가 강화됐다. 그러나 그전에도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겠다는 약속 따위는 지킬 생각이 없었던 듯하다.

‘기후 리더’를 자처한 미국 바이든 정부는 COP26이 끝난 지 불과 4일 뒤인 2021년 11월 17일, 멕시코만 일대 32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을 석유·천연가스 기업들에 제공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워싱턴 포스트〉, 2021년 11월 17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아예 미국 연방환경청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영국 정부는 북해에서 신규 석유·천연가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기후 운동 단체 ‘스탑 캄보’ 활동가 로런 맥도날드에 따르면 영국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석유·천연가스 사업이 30개 이상이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던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축소하자 석탄 발전을 확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유럽연합의 석탄 소비가 2021년 14퍼센트, 2022년 7퍼센트 늘

것으로 예상했다.

녹색당과 사회민주당이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독일 정부는 최근 석탄 발전 확대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독일에서 최장 2024년까지 운영 기한이 연장되거나 재가동이 예정된 석탄발전소는 총 21곳에 달한다.

구제불능 자본주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팬데믹과 불황, 전쟁 등으로 요동치면서 가뜩이나 꺾죄죄하던 주요 선진국들의 기후 위기 대응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런 추세 속에서 세계 최대 석탄 소비국인 중국과 인도의 석탄 사용량도 늘고 있다. IEA는 중국에서 2022년 상반기에 코로나19 봉쇄로 석탄 수요가 3퍼센트 감소했지만, 하반기에는 예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2030년이 돼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올해 4월 쯤 50도에 육박하는 때 이른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던 인도는 올해 들어 문을 닫았던 탄광 100여 곳을 재가동하고 7년 만에 처음으로 석탄을 수입했다. 인도의 올해 석탄 수요는 지난해보다 7퍼센트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2021년에 신규 석탄발전소 두 곳(신서천, 고성하이)이 가동을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4월 영구 폐쇄된 삼천포 석탄화력발전소의 재가동을 검토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일단 보류했다. 하지만 7월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상황을 고려해 석탄 발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하며 석탄 발전 확대에 여지를 남겼다.

기후 변화의 파괴적 효과가 세계 경제 전체, 심지어 기업주들의 이윤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지만, 지배자들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분명해지고 있다. 이들의 대응이 자본주의적 방식, 즉 이

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기후 위기를 가속할 뿐이다.

기후 위기를 멈추기 위한 합리적 대응, 즉 국제적 협력과 충분하고 신속한 재정 지출, 무엇보다 화석연료와의 단절은 자본주의가 아닌 완전히 다른 원리로 운영되는 사회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천문학적 이익 거둔 화석연료 기업들

기후 위기의 주범인 화석연료 기업들은 전쟁과 에너지 위기를 이용해 천문학적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다.

석유기업 엑손은 2022년 2분기에만 178억 50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거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배 규모다. 셰브론, 쉘, 비피, 토탈 등 주요 다국적 석유기업들이 모두 기록적인 수익을 올렸다.

한국 정유사들도 마찬가지다. 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합하면 무려 4조 7668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기름값을 대폭 올려 평범한 사람

들에게 유가 상승의 부담을 떠넘기고 막대한 이윤을 남긴 것이다.

이런 현실을 보면 일각에서 제기하듯 형제세를 거둬 평범한 사람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기후 위기가 전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런 조처는 너무 미약하다. 기후 위기를 멈추고 그로부터 생겨나는 고통을 근본에서 제거하려면 그보다 훨씬 급진적인 조처, 즉 이들의 기업 활동을 완전히 멈춰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도전하는 운동만이 그런 조처를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부패 정치인·기업인 말고

미등록 이주민 사면·합법화하라

지난달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문제가 제기됐다.

시대전환 국회의원 조정훈은 “불법체류자”가 40만 명에 달한다며, 이들에게 4~5년간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합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중소기업·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 6월 기준 한국 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6만 명이다. 총 외국인 수의 약 5분의 1이 미등록인 것이다.

미등록 이주민은 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생활하며 단속의 공포에 시달린다. 불안정한 체류 자격 때문에 나쁜 노동조건을 강요받고,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 보장 제도에서 배제된다. 미등록 이주 아동을 성인이 되면 말도 안 통하고 가 본 적도 없는 ‘출신국’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조정훈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우리 젊은 층이 일자리를 뺏긴다는, 나름대로 이해할 만한 반발심을 갖고 있는 부분도 보듬어야 한다.” 사실상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를 거부한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이간질 논리다. 이주 노동자들은 농업,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노동조건이 열악해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분야에 주로 종사한다. 임금과 일자리를 공격하는 정부와 사용자들이야말로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주범이고, 끊임없이 경제 위기를 낳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문제다.

한편,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 지원 모임인 ‘마중’ 등 단체 15곳은 광복절 사면을 앞두고 미등록 이주민 전원 사면과 합법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온갖 부패한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사



2019년 8월에 열린 이주노동자 대회

면 대상으로 거론되는데, 정작 위험하고 고된 일자리에서 노동력을 제공해 온 미등록 이주민들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다.

정부는 이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단속추방 피하려다 사망까지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래로,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 대책 기조는 단속과 추방이었다. 정부의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보면, 단속 인원과 장비 확대, 광역·기동단속팀 구성, 특별 단속 지정, 브로커 기획 조사 강화가 그 주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단속추방으로 인한 미등록 이주민의 고통은 엄청나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들을 ‘토끼몰이’식으로 사냥하듯이 단속해 왔다. 2000년대 이래 30명이 넘는 이주민들

이 이런 반인권적 단속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사망했다.

외국인보호소는 단속에 붙잡힌 미등록 이주민을 출국할 때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그중 하나인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지난해 11월 ‘새우껍기’ 고문, 올해 4월 시리아 난민 22개월 불법 구금과 고문이 벌어지는 등 열악한 조건과 인권 침해로 악명 높다.

얼마 전 태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로 입국 후 잠적해 미등록으로 취업한다는 제기가 있자, 법무부는 이번 달 2~5일 사이 입국한 태국인 679명 중 60퍼센트인 417명의 입국을 불허했다. 한 항공편을 타고 온 태국인 100여 명이 그대로 태국으로 송환되기도 했다.

사용자의 필요만 고려

그러나 미등록 이주민을 전부 단속해 추방할 수 없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도 알고 있다. 대정부 질의에서 한동훈은 “불법체류자를 다 몰아내는 것이 답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 대신 정부는 단속추방을 강화했다. 완화하기를 반복하며 미등록 이주민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려 해 왔다.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가 전례 없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때조차 이주민에게 별로 이로운 방식이 아니었다.

예컨대 2003년 노무현 정부는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당시 미등록 이주민 일부를 합법화했다. 그러나 체류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 국한해 최대 2년의 체류만 허용하는 등 조건부 합법화였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가 충분히 들어올 때까지 인력 부족을 막고자 일부에게 일시적 체류를 허용한 것이다.

합법화된 경우에도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공표하는 업종에서 취업”하도록 했다. 이주노동자들의 바램은 무시하고 사용자들의 입맛에 따라 배치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여론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때로 사용자들의 필요에 따라 단속을 느슨하게 하며 저렴한 노동력 착취를 허용해 왔다. 부분적인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를 할 때도 이주민의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사용자의 필요에 맞는 방식으로 시행했다.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은 그들에게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을 강요하면서, 합법 체류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이동을 금지한 고용허가제 등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구실을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를 내국인 일자리나 복지를 빼앗는 존재로 여기게 만들어 노동계급의 단결을 어렵게 한다.

이주민에게 고통을 낳는 국경 통제와 단속추방에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을 겨냥한 인종차별과 혐오 조장에도 맞서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미등록 이주민을 조건 없이 합법화해야 한다.

박이랑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펠로시의 대만 방문과 후폭풍

대만을 둘러싼 미·중 긴장, 왜 높아지나? 파장은?

8월 18일(목) 오후 8시 발제 김영익 <노동자 연대> 기자, <제국주의론으로 본 동아시아와 한반도> 공저자

참가 신청 bit.ly/0818-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 가능)

☎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